

2012. 5. 22.

보도자료

이 자료는 5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발간

세계 경제질서 재편과 한국의 역할에 관한 석학 12인의 분석과 전망

- KDI는 최근 글로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아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담은 대중서적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을 발간
- KDI는 국내 최고의 석학 12인의 분석과 전망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 국민들과 널리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변화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 제고를 모색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 FTA 등 최근 발생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조화로운 사회적 합의 구축을 위해 서도, 변화하는 세계경제 시스템 내의 우리 현주소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발간에는 임영재,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국내 최고의 경제석학들이 집필자로 참여, 성장·고용, 세계경제 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글로벌 금융개혁, 무역, 에너지·기후변화·녹색성장, 개발, 글로벌 거버넌스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함.

○ 보고서는 첫째, 우리 사회가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둘째,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우리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째, 과연 우리가 어떤 이슈에서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넷째,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함.

○ 장별 집필진

제1장 선진국 클럽모델에서 자국 클럽모델로(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제2장 불확실성의 세계경제(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3장 심화된 세계경제 불균형(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4장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두용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제5장 글로벌 금융개혁(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제6장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제7장 거대한 기후변혁의 시기(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8장 국가 소프트파워의 원천, 한국 개발 스토리(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제9장 한국적 리더십, 무엇이 문제인가(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KDI(원장: 현오석)는 지난 5월 17일,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음.

❖ 문의: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02-958-4176)

제1장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쌓아온 내부 역량과 외부 요인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임.
 -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경험은 후진국들이 닮고 싶어 하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
 - 세계 질서는 G7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선진국 중심 체제에서 신흥국들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된 G20의 다극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
-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G20의 다자지배 체제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이익 극대화를 모색해 나아가야 함.
 -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올라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
 - 한국은 빠른 인구 고령화,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낙후성, 부족한 글로벌 감각 등 내부적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부상하는 신흥국들과의 경쟁 및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외부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야 함.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하드파워(hard power)의 증진과 더불어 정치·외교·문화·교육·사회 제도의 발전을 통한 소프트파워(soft power) 제고가 요구됨.

- 소프트파워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G20을 비롯한 다자 외교에 초점을 맞춘 국가전략을 지지하는 국민 의식변화가 필요
- 타 문화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이 확립될 때, 한국은 다자외교의 진정한 중심국으로서 다양한 경제협력체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과 전문 연구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G20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 진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미래를 주도해 나아갈 글로벌 리더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임.

제2장 불확실성의 세계경제 성장과 고용, 위기와 정책대응에 관하여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어 발생한 유럽의 재정금융위기로 인해 오늘의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음.
 - 금융위기를 거치며 많은 나라들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가 양산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현재 GDP의 10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로지역 일부 국가의 국가부채위기가 전면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 유럽 정부부채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정책은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함.
 - 그러나 재정내핍정책, 재정규율 통한 재정통합, 유로존의 조정·해체 등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은 모두 정치적 반발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해결과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정책으로 유동성 공급과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또한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전이 차단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 완화를 위한 적응적/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실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적으나 모럴해저드 유발 등 장기적으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부추겨 오히려 위기를 앞당기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음.
- 이러한 딜레마를 피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기 없이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정책 결정은 순수하게 정책의 경제적 효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G20의 부상은 세계화 진전에 따라 위기가 세계화하고, 전염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위기 대응정책의 세계화 및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을 반영

제3장 심화된 세계경제 불균형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글로벌 불균형은 위기 이전부터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으나 위기 이전 미국의 거대 쌍둥이 적자 등을 통해 세계경제 불균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결성된 G20은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
- 세계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G20의 플랜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 내용,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확립 방안에 대해 살펴 봄.
- 세계경제 불균형은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왜곡에 의해서 초래된 측면이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의 재정수지 적자는 각국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민간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은 주로 정책적 왜곡에 의해 초래되었음.
 -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G20 각국이 제시한 액션 플랜을 통화·환율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의 네 영역에서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공지출과 민간지출, 해외지출과 국내지출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우리나라도 구조 개혁과 정책적 왜곡 시정을 통해 투자와 가계저축을 제고하고, 수출과 내수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 부품소재산업 낙후, 중소기업체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제4장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통화체제의 근간을 흔들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두용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통화체제 개편은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국제적 정책 공조 과제임.
 - 지난 40년간 국제통화체제는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급격한 자본 이동에 따른 신흥시장국 위기의 반복, 글로벌 불균형 등의 문제를 노정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협조 없이는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통화체제 개편 논의에 신흥시장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주요 이슈는 비효율적인 글로벌 조정 과정의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임.
 - 현재 미달러화 중심의 단일 체제를 유로화 혹은 중국 위안화 등이 포함된 복수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자본 이동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자본 이동 관리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확충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부분들도 있음.
 - 하지만 국제 통화 체제는 다양한 측면의 총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국제 통화 체제의 개편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또는 신흥시장 국내에서의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세계경제 안정화를 위한 G20의 다양한 정책 공조에 기여했으며,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향후 신흥시장국들 간의 이해상충과 관련해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ASEAN+3로 대변되는 아시아 지역권의 금융·통화 협력분야의 조정자 역할 또한 한층 제고해야 할 것임.

제5장 글로벌 금융개혁 견제인가 균형인가

신현송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하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사건임.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들은 거시경제적 안정, 금융자유화 및 겸업화, 다양한 금융기법의 발달 등을 통해 확대된 신용을 바탕으로 고소비를 향유했음.
 - 성공적인 통화정책 운영과 중국의 부상으로 저금리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졌으며, 금융자유화 및 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기관 간 경쟁과 다양한 금융기업의 발달을 통해 신용공급이 크게 확대되었음.
- 금융감독 당국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신용확대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에 침묵했으며, 과학적 위험관리에 대한 맹신으로 규제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신용급증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실패
-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금융회사(SIFI)와 무분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
 - 기존에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성숙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범경영을 실시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시각이 존재했음.

-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규모가 큰 금융회사가 오히려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자산유동화,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해 전세계 금융투자자가 연계됨에 따라 작은 규모의 충격이라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졌음.
 - 한편, 은행들도 경기가 하강해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데, 이는 다시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G20 정상회의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및 서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2010년에 주요 성과물인 바젤자기자본협약(바젤 III)를 도출했음.
- 기존 바젤II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금융시스템 전체의 충격이 개별금융회사로 전이되어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음.
 - 따라서, 바젤III는 경제전체의 유동성 충격에 대비, 개별 금융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했음.
- G20 정상회의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전체의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에 합의
- 2010년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에는 “과도한 자본유출입 완화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추가작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또한, 2010년 G20 서울선언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환율이 고평가 되어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자본유입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자본유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음.

제6장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그 이면엔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각국 보호무역정책의 강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가 부활되지 않도록 G20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으나 주요 교역국들이 잇달아 보복관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불황에 빠진 역사적 교훈이 있음.
 -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바, G20를 통해 보호주의가 저지되어야 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차에 걸친 G20정상회의에서의 무역의제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각각의 합의 결과를 평가
 - 보호무역조치 동결 선언, 원상복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부터 WTO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음.
- 한국은 G20 무역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보호무역조치동결 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협상력 성장을 보여줌.
 - 그러나 G20 거버넌스 구조문제에 기인해 동결조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현상임.

- 재무관련 의제는 재무차관회의,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도달하는 반면 무역의제는 셰르파(Sherpa)를 통해 바로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방식으로 정책당국자 수준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절차적 구조가 미흡함.

- G20에서 무역의제논의가 선언적 성격에 머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셰르파 - G20정상회의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탈피, 통상장관회의를 상설화해 보호주의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제7장 거대한 기후변혁의 시기 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양적인 차원의 풍요를 누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및 자연자원의 고갈 위험, 에너지 및 식량 안보문제 등 부정적 결과 또한 발생했음.
 - 화석연료 및 자연자원의 고갈 가능성은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와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과거의 화석연료 및 에너지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서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임.
 - 경제성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인 녹색성장 전략은 개발도상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짐.
 - 후속조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발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설립 주도,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국회통과 등 명시적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이상을 점유하는 G20 국가들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정책을 도입해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적 원자재 확보전쟁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물시장 및 상품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산유국과 소비국 간의 소통,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간 협의체로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2010~0012 긴급자금 300억달러,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와 에너지 중심의 발전전략에 의존한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임.

- 화석연료 보조 철폐를 위한 산업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과거 발전경험과 녹색성장 전략 수립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국으로 기금 설계 단계, 운영에 관한 의견도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제8장 국가 소프트 파워의 원천, 한국 개발 스토리

서울 개발의제, 정책한류의 장을 열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이 수많은 개발원조를 개도국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빈개도국 지위를 벗어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함.
 - 이는 선진국이 백여 년 전에 경험한 개발경로는 개도국에 적용하기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과 기존 국제개발협력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개도국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개발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은 국제개발협력에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음.
- ODA 재원의 측면에서,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된 한국의 역할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의 OECD DAC가입은 1961년 DAC가 발족한 이래 원조 수혜국중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원조공여 선진국 지위로 올라선 세계 최초의 사례임.
 - 한국의 GNI 대비 ODA 총량은 2000년에 0.04%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0.12%로 증가했으며, OECD DAC 가입조건에 따라 2015년까지 0.25%까지 확대될 전망

□ 전 세계 개발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 개발경험에서 글로벌 개발 무대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요소들은 첫째, 함께하는 경제성장(shared growth), 둘째, 인프라 정책, 셋째, 주인의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한국은 1950년대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며 빈곤에 시달렸으나 1960~80년대 산업화를 통해 공급된 안정적인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농촌의 유희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경제성장의 결실이 많은 국민에게 나누어질 수 있었음.

○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국제경제기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으며 이는 효과적인 국가 시스템 정착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개도국들에게 전달함.

○ 한국은 숭한 시행착오를 거쳐 당시 한국 상황에 적합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개도국의 개발경로는 개도국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시사함.

□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이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여건 하에서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활용된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다자 개발플랫폼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짧은 시간에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두 차례 글로벌 다자 개발플랫폼에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제9장 한국적 리더십, 무엇이 문제인가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저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합의 등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이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규칙준수자에서 규칙제정자로 한국의 국가 위상이 변화했음을 시사

-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한국은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익보다는 국제사회의 공익을 추구해야 함.
 - 즉, 중견국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들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 중심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임.
 - 현재 국력으로는 한국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국제협상의 판도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지식전파와 봉사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축적해야 함.